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 한 태 의원)

의안 번호	406
----------	-----

발의연월일: 2022. 11. 10.

발 의 자: 김 한 태 · 오 연 환
이 주 한 의 원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비밀엄수의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지역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적응기반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체육행사 지원
6.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7. 구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지원시책 발굴·추진과 관련하여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70명 이상이 될 때에는 협의회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관계 공무원, 제8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여에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세대의 단위)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 등)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

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 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